

간호사협회 찾은 윤석열 “간호전사에 공정한 처우 보장돼야”

“韓, OECD대비 간호사 절반수준 이직률 높아 근무연한 7~8년 수준”
간호사회장, 간호사법 제정 촉구



윤 후보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 전사’를 만났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시간호사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간호사 격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간호 전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안전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애로와 숙원을 깊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간호사회관에 방문한 윤 전 총장은 서울시간호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노력을 다하는 간호사를 뵈고 나니 ‘간호 전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지난 20일 대구 방문 당시 지역 코로나19 방역 거점이었던 동산의료원에서 현장 의료진 목소리를 들은 바 있는 윤 전 총장은 이번 서울간호사회와 간담회

에서 “우리나라가 OECD 대비, 간호사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되고 워낙 힘든 직업이다 보니 이직률도 매우 높아 통상 근무연한이 7~8년 정도밖에 안 된다. 간호사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재인식해 ‘공정한 나라라면,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이 윤 전 총장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인숙 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 스트레스로 점차 지쳐가고 있다”며 “미국, 일본에도 있는 간호법이 선진국이라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없으며 국민 건강 증진 위해 (간호법) 반영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도 윤 전 총장에 ▲중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코로나19

수당 제도화 ▲간호사 수당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박 회장이 요구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전체 보건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국민과 공유해가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서면 미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文 대통령, 서면 美 국무 부장관 접견

북미대화 촉진·한반도 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워싱턴(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촉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에도 북한 측 반응은 없어,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로 나서려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35분간 일정으로 서면 부장관을 만났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텔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서면 부장관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서면 부장관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서면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접견에 사의를 표명한 뒤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과 서면 부장관 두 분의 탁월한 외교관으로 짜인 국무부 진용을 보면 ‘외교관의 귀환’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며 “한미 동맹과 한반

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가 대화, 외교로 양국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한 점’을 상기한 뒤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서면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생존 문제’로 평가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지금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점을 언급한 뒤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협의할 기회가 조성되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면 부장관은 문 대통령 당부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대북 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25~26일 중국 방문 시 대북 정책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면 부장관은 방중에서 양이 외교부장관과 접견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h@

“윤석열, 지지율 위험… 과거 안철수와 비슷”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정치 하려면 여의도서 겨뤄야
회피 모델 대부분 성과 안 좋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장외 야권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섰던 검사가 용기를 잃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계륜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외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게) 아쉬운 지점은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에 처음 참여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아주 비슷한 판단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여의도 정치에 거리가 있는 분들은 여의도가 아닌 곳에 캠프를 차리려 한다. 정치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하지, 회피하며 정치하는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밖에 있는 이유는 중도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형식의 혼란이 아니라 방향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입당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이마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린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0일 대구에 방문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현재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대해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보수 전체 지지층에 양해받는 것은 중도확장성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의 지지세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 전 총장이) 광주에 가서 전향적 발언을 하고, 대구에서는 대구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며

“탄핵에 대한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당대회 대구 연설에서 상당히 용기를 내 발언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용기를 잃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3일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직 박탈과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 생각은 없다”며 “여러 가지 사안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젠다를 형성해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회담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태홍 기자

낙후 농공단지 ‘미래형 산업단지’ 탈바꿈

정부, 매년 4개씩 5년간 20개 조성
과거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였으나 지금은 낙후한 전국 400여개 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미래형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농어촌지역에 조성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간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단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단지가 2021년 기준 62.2%에 달하고, 농어촌 인구유출, 낙후지역 입지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농공단지를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

름다운거리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매뉴얼화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을 연계해 농공단지과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